한국의 종합상사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신장철(일어일문학과)

I. 들어가기

한국의 경우, 6, 70년대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34년간 종합상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즉, 1975년 상공부 고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도입된 종합무역상사(이하, 종합상사) 지정제도는 2009년 4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폐지되게 되었다.

물론, 1970년대 중반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상사를 육성하여, 1980년대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을 다양화 하는 등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중국경제의 급성장, 정보기술(IT)기술의 급진전 등에 의해 교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8, 90년대에 걸친 국제경제 질서의 급변은 종합상사의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즉, 교역환경이 글로벌차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경쟁 환경이 변화하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직수출의 비중이 증가되는 등 종합상사의 역할기능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내 종합상사는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에 대한 미숙한 대응, 자

원시장의 폭락, 그리고, 정부에 의한 세제·금융 지원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은 업적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1970-80년대에 걸쳐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종합상사가 상기와 같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종합무역상사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즉, 2009년에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게 된 배경은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의한 대외여건의 변화와 함께 기술 및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상사기능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도의 경우에는 수출중소기업에 의한 직수출 비중은 18.7%에 그쳐, 특정 지역과 제품에 수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내수와 초보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되었다.

이에 2014년 7월 22일부터 법적으로 출범하게 된 이른바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종래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대체된 것으로, 민간주도로 중소·중 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도입되게 되었다. 즉, 수출 및 해외시장 마케팅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상사의 상기와 같은 변모과정을 추적하여,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고찰한다. 뿐만아니라 전문무역상사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향후의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무역전문상사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사업의 성과가 극히 부진하여, 근년에 들어 개선방안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한국 종합상사의 개요

1. 도입 배경 및 과정

1960년대 초반이후 70년대 중후반에 걸친 한국경제의 공업화정책은 정부주도에 의한 수입 대체공업화와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의 추진이 핵심전략이었다. 즉,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은 '자립경제의 완성'을 목표로하였으며, 그 달성을 위해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를 달성하는 '수출 드라이버정책(Export Drive Policy)'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상기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던 1960년 초반이후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4개년 계획기간 중인 1962년에서 1966년에 걸쳐 연평균 7.7%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수출 증가율은 무려 42.9%를 기록하여 당시 경제성장의 패턴은 수출>수입>경제성장의 유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70년 초에 IMF체제가 붕괴되어 국제통화질서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뒤이은 제1차 석유위기에 의해 교역환경이 악화되어 종 래의 정부주도에 의한 외형중시의 수출 확대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원화가치의 절하를 포함하는 환율 및 금융, 그리고 세제상의 지원정책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위와 같이 정부에 의한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1974년 말에는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크게 감소하였으며, 1975년도의 수출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당시 수출은 1966년 이후부터 75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4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증가세는 1973년을 피크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제1차 석유위기의 영향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끼쳐, 1974년과 1975년도의 실적은 연속해서 전년도의 수출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으며, 1975년도의 증가율은 13.9%에 불과하여 과거 10년간의 수출증가율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장기화

될 조짐을 나타내어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

2. 종합상사 지정제도의 도입

상기와 같이 70년도 초·중반의 석유위기에 의한 통상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국내기업의 수출부진 사태 등에 의한 경기침체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당시 정부의 재정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워 새로운 수출정책의 필요성을 강구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지속적인 수출증대와 해외시장확보,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1974년도에는 전체 1,751개 무역업체 중에서 5,000만 달러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는 15개사에 불과했으며,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업체는 무려 919개사로써 전체의 55%에달하였다(경향신문, 1975, 3월 31일자 2면 "종합무역상사 육성"관련기사). 이에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무역활동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수출 진흥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소고쇼사와 같은 대규모 상사조직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주무 부서였던 상공부는 1973년 3월에 일본의 이토츄(伊藤忠)상사의 부사장인 세지마류조(瀨島龍三)가 제출한한국의 종합상사 설립과 관련된 보고서 문건²⁾과, 그 다음해인 1974년 6월에 삼성물산과 대우실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상사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즉, 상공부는 상기의 세지마류조의 계획서와 민간기

¹⁾ 상기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장철(2015),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한일경상 논집 제66권, 한일경상학회, pp. 16-20 참조바람.

²⁾ 그 구체적인 내용은 "韓國に於ける總合商社創設計畵について(私の愚見)이며, 1973년 3월 12일자로 당시 이낙선 상공부장관에게 개인적 입장에서 일본의 종합상사 현황과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것임.

업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하고, 또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상공부의 상기와 같은 구상은 1975년 1월에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처음으로 건의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마침내 1975년 4월 30일에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령'을 상공부 고시가 공포되어, 종합상사제도가 정식적으로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관련 법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의 지정요건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1)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 점유하거나, 2)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3)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들 요건들을 충족한 삼성물산은 1975년 5월에 최초로 종합상사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어서 대우실업, 쌍용산업 등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5개사였으나, 1978년에는 13개사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부터 한일·금호·국제상사 등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종합상사가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섰기때문이다. 당시 정부에 의한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은 크게 행정, 금융, 외환관리의 3개 부문에 걸친 것으로, 종합상사가 수익성을 확보하고 업무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에 걸쳐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평가되고 있다.3)

Ⅲ.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

³⁾ 상기에서 기술된 부분은 신장철(2015), "한국의 수출드라이버정책과 종합상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유라시아연구제12권 제3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pp. 89-108의 전체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부분 인용하였음.

1. 지정제도 폐지 이전의 종합상사

이처럼 한국에 있어서 종합상사 도입과 그 필연성은 주지한 1970년대 초 반의 국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상사활동이 가능한 기업조직의 설립과 관계가 있으나, 그 운영방법과 기능 등과 관련 해서는 당시의 정책입안자는 일본의 소고쇼사(總合商社, 이하 종합상사)와 같은 대규모 상사조직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1975년에 출범한 종합상사는 한동안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 첨병역할을 함으로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달성과 무역입국의 실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종합상사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으며, 제조업체의 직접수출 비중도 크게 높아 졌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종합상사 무용론'에 직면하여 고강도의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18일부터 해외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1백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 수출대상국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완화시켜(대외무역법 시행령제18조의 2 제1항) 종합상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50%이상을 차지하였던 종합상사에 의한 수출은 2008년도에는 6.58%로 대폭 감소하여 존재감이 사라졌다. 종합상사제도의 폐지 이전에는 대부분의 재벌계 그룹들이 종합 상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종합상사를 두게된 배경에는 무역 네트워크에 특화된 계열사를 둠으로서, 특정업종에 전문화된 계열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그룹차원의 매출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종합상사는 개별 제조업체의 수출대행 능력이 떨어지고 그룹내 수출대행 업무가 줄어들어 기능이 축소되고,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화되어급기야는 대외무역법에서 종합상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되었다.

2009년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존재한 7대상사를 현재의 업체명을 기준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네트웍스, GS글로벌, LG상사, 효성 무역부문 등이 종합상사로 활동하였다.

2. 교역환경의 급변과 지정제도의 폐지

앞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60년도 초반이후 정부 주도에 의해 1,2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취해졌다. 그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외형위주의 수출드라이버 전략이 취해졌는데, 이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종합무역상사는 수출확대를 위한 첨병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무역입국 달성과 고도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4특히, 1970, 80년대에는 정부에 의한 금융 및 세제(稅制)상의 지원조치 등을 통해 급성장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국내·외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종합상사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종합상사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수출은 종합상사보다는 제조업체 몫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특히, 1997년에 외환위기를 전후해 경영위기 상황에 빠진 종합상사들은 고강도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다.

2000년도에 접어들어 정보기술(IT)기술과 유통혁명이 급격히 진화하면서, 종합상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11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함을 계기로 글로벌 교역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수차례 걸친 미국 및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국제 자원가격이 급락하고 교역규모가 대폭축소되어 한국의 대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종합상사를 둘러싼

^{4) 1970}년대 중반이후의 중화학 공업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증대에 의한 무역입국과 고도경제성장 달성 등에 관한 내용은 신장철(2015), 전게자료, pp.16-20 참조바람.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 수출의 주종 품목 인 자동차, 전자, 철강제조부문의 직접수출 비중이 증가되었던 상황은 기 존 종합상사의 실적부진에 박차를 가하는 격이 되었다.

수출악화와 업적부진에 의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략된 종합상사의 실태가 정책에 반영되어, 마침내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상사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되었다. 다시 말해,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종합상사 지정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에 위양하여 자율규정에 따르게하고, 중소·중견규모인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전문무역상사제도는 법령에근거한 정부주도에 의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의 관심과 정책적인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졌다.

Ⅳ.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과 향후과제

1. 도입과정 및 제도화의 내용

(1) 일부 관료에 의한 입법화의 추진5)

한국정부는 2013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도입하여 정책차원에서 지원하고 자 하였다. 이처럼,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은 일부 관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지경부)의 무역진홍과에 근무하였던 김선민 과장의 아이디어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⁵⁾ 이 부문의 기술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을 보다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자의 실명을 밝혔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http://www.kita.net/stc/info/TradeNewsView.jsp?seq=15709&searchType=T&keyword=(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전문무역상사 섹션의 주간무역뉴스 "전문무역상사제도 본격 시행"관련 기사 참조 및 인용하였음.

다.

김과장은 지난 2007년에 미국에 1년간 연수를 다녀오면서 미국 중소기 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무역상사제도'를 귀국 보고서로 제출하였고, 무역진흥과장으로 발령받자 KOTRA를 통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려고 시도하였다.6 당시 김과장은 HS 6단위로 품목별로 세분화 해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해 내수 및 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그 사실을 보고받은 한국무역협회의 오영호 부회장이 그 구상에 착안하여 2008년부터 한동안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전문무 역상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014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한 국무역협회가 지정한 전문무역상사는 171개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종합상사제도가 대외무역법개정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자, 한국 무역협회는 2008년부터 법으로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른바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정부지원의 부족, 제조업 중심의 지 정, 제품발굴의 애로 등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하였던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문무역상사제도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2013년 하반기부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밟아 2013년 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법제화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무역관련 담당 과장을 수차례 역임한 바 있는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실장은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를 이어갈 무역상사 육성제도의 도입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면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법제화는 내수 및 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언급하는 등 일부 관료의 아이디어에 의해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⁶⁾ 당시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품목과 지역별로 전문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상 사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 생산 제품은 물론,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 스까지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벤치마킹한 결과,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하였다.

여기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업계와 학계로 부터의 의견수 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음이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상기 내용을 통해 현행의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일부관료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른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상사기능의 강화, 그리고 효율성 확보 등에 대한 학계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합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지정요건7)

상기와 같은 법제화를 위한 절차를 거쳐 과거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대신할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새로 도입돼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즉,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과시행령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산업통자원부 고시 제2014-124호)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8조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제2014-124호) 제7조 1(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로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자, 2)전체 수출실적 대비 다른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수출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

⁷⁾

https://www.exportcenter.go.kr/common_board/weeklytrade/notice_read.jsp?num=23578 &board_type=1&curPage=1&select_box=sTotal&sSearchTxt=#(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 5)

분의 3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8)

상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 가운데 다른 회사 제품 취급실적이 30% 이상을 충족하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수산업, 서비스업 등 시장 다변화와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능력을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선정 후 2년간의 전문무역상사 지위 유지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선정에서 탈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전문무역상사제도가 2014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문무역상사의 법정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한국무협협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25일 최종 선정결과를 공지하였다. 2016년 현재, 무려 216개의 전문무역상사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2.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운용주체와 사업모델

(1) 운용주체

상기와 같이 전문무역상사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2009년 10월 23일을 기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 진흥을 위한 모델로서 출범하였 다.

특히, 2014년 7월에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되고, 종합상사에 대한 운영권이 무역협회로 넘어가면서, 과거 지

⁸⁾ http://ctc.kita.net/stc/info/Overview.jsp(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자: 2016. 10. 3)

⁹⁾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제4회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 행사관련 자료 참조.

식경제부에 있었던 종합무역상사협의회가 한국무역협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개편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의해 전문무역상사가 법정제도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함께 중소및 중견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제정하게 된 당초 목적은 수출 노하우가 풍부한 무역에 특화된 전문상사를 선정하여,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전문무역상사제도의 주된 운영주체는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부문의 한국무역협회이며, 이외에 중소기업청,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사업모델과 지원체제

전문 무역상사제도는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여기서 전문무역상사란 수출 잠재 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전문무역상사는 다음 과 같은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판매·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를 전문무역상사로 활용하는데 있었다. 즉, 국내 중소 및 중견규모의 제조업체가 중심이 된 전문무역상사와 무역협회 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의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기능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외에 중소기업청,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의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0) 즉, 무역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무역상사편에 게재되어 있는 기

¹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2014년 전문무역상사 법정 지정공고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홈 페이지, 종합·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수출 우대지원'실시 해당 관련

관별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1)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순회 수출상담회, 무역 아카데미 수출역량 강화교육,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매칭, tradeKorea 전용 홍보관 설치 등, 2)중소기업청: '무역촉진단' 참여 우대, 수출유망제품 매칭 등, 3)KOTRA: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buying offer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등, 4)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우대,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 확대 등으로, 금융, 마케팅, 교육, 대외홍보 등의 분야에서 기관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문무역상사의 현황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2014년 7월 25일부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의욕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근년에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놓이게 되어, 국내 수출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문무역상사의 실적도 가시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주관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26일에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제도의 강화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정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기업의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몇몇 유통관련 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가 그것으로, 국내 소비부진으로 수년째 매출이 정체된 국내 유통업체들이 '돌파구'로서 해외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11)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내용 참조.

¹¹⁾ http://www.ebn.co.kr/news/view/845458(EBN, 2016.8.11일자 관련기사, 검색일: 2016. 10.11) 및 증권일보 2016.12. 5일자 관련기사 등 참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업체가 중소제품을 파는 경우 무역보험에서 무역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것과, 2)우수한 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코트라 등의 유관 정부기관에 매칭시켜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3)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사업을 출범시키는 것 등으로 들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은 전문무역상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단순한 유인책으로, 민간 수출전문상사가 주도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정부는 2014년에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판로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5년의 수출대행 실적은 9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무역상사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한 것 등에 의해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2) 한계 및 문제점

2014년 이후부터 실시되어온 정부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의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무역상사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무역협회의 홈페이지 상에 전문무역상사지정에 따르는 혜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2) 즉, 전문무역상사의 지원제도로서, 1)지역별로 유망한 내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2)해외 유망전시회에 공동 참관단을 파견하는 사업에 대한지원, 3)품목별로 해외 바잉오퍼를 제공, 4)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망을통한 상시적 매칭, 5)인도적 물품의 대(對)이란 중계무역에 대한 자격 부여, 6)기타 수출 유관기관의 각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들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상역활동과 일부 교역대상국에 혜택이 치우쳐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된 무역전문상사는 해외인프라와 정보기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¹²⁾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ctc.kita.net/stc/info/NoticeView.jsp?seq=15756(2016 전문 무역상사 추가 모집 공고(기한 연장) 관련내용(검색일 2016. 11.10).

것과는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명목과 형식에 치우친 정부에 의한 지원제도는 전문무역상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최대과제인 중소규모의 제조기업 또는 공급업체와 무역상사간의 상호 신뢰기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수출의 실질적인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및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국별, 품목별 시장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입수능력 강화)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향후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수출지원정책과함께 기존의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나오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1975년에 수출드라이버정책의 일환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제도화되었던 종합상사가 30여년 간에 걸쳐 수출증대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여, 산업고도화와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8, 90년대의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하였던 종합상사 지정제도가 2009년에 폐지되고 2014년에 전문무역상사로 변모되어온 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2009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2014년에 전문무역상 사제도를 의욕적으로 출범시켰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침체와 교역규모의 축소라는 대외요인과 맞물려 전문무역상사

에 의한 수출증가는 극히 미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당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전문무역상사가 업적부진에 빠진 이유는 상기의 외부요인과 함께,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적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우선,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의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높지 못함을 꼽을 수 있다. 즉, 1970년대 중반이후 무역입국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정부주도의 수출 증대사업=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라는대기업그룹 내의 거대 무역상사라는 고정관념이 새로 탄생한 중소·중견중심의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의 관련기관들이 수출 지원책이 형식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강하고, 지원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요소들도 전문무역상사들의 성장에 한계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무역상사가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법제화에 따르는 정책적 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첫째, 전문무역상사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기존 종합상사와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둘째 전문무역상사의 수출장려에 지나치게 치우쳐 사업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며, 수출업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한 사실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전문무역상사는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여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의한 정책적 지원조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자발적 노력에 의해 수출증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박필수(1992), 한국무역론, 법문사.

삼성물산주식회사(1996), 종합상사 20년사, 종합상사 20년사 편찬위원회.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편(1988), 대외무역법, 법문사.

신장철(2015), "한국의 수출드라이버정책과 종합상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라 시아연구 제12권 제3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____(2015),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원조경제의 탈 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제66권, 한일경상 학회

이종윤(1987), 종합상사론, 법문사.

이헌창(2012), 한국경제통사, 해남.

전국경제인연합회편(1986), 한국경제정책40년사.

조동성(1984),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수정판), 법문사.

종합무역상사협의회편(1989.5), 종합무역상사의 장기발전방향.

吉田憲一郎(2006), 商社, 日本経濟新聞社

宮坂義一(1991),總合商社,二期出版

渡辺利夫(1986)、開發経濟學-経濟學と現代アジア、日本評論社.

日本貿易會, 홈페이지, 2016년 10월 검색

瀬島龍三(1973.3.12), "韓國に於ける總合商社創設計畵について(私の愚見)."

서울신문(1977.5.4-6.1), "종합상사 시리즈" 관련기사.

경향신문(1975.3.31.), "종합무역상사 육성" 2면 관련기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 자료, 국가기록원 및 기타 관련 인터넷 자료 등.

<Abstract>

Korean GTC(General Trading Company) were institutionalized in the mid 1970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xport driver policies. Since then, Korea's GTC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increasing exports for a long period of 30 years and has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in the 1980s and 1990s, globalization spread and the trading environment changed drastically. As such, the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TC deteriorated sharply, and the design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2009. As a new means of expanding exports, a Specialized Trading Firm system was introduced in 2014.

This study has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GTC system into the Specialized Trading Company system were discussed.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Foreign Trade Act in 2009 to dramatically increase expor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urthermore,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ized Trading Firm system in 2014 were discussed. However, the export performance of Rrofessional Trading Firms is extremely sluggish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seen in recent years and the external factors that reduce trade size.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above changes and facts. It also provided some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GTC(General Trading Company), Specialized Trading Firm, Foreign Trade Ac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lobal economic recession